

# 쾌적한 환경의 보전·관리

## 5-1. 환경보전 관리기능의 강화

5-1-1. 동부권에 실질적 「제2청사」 신설

5-1-2. 산업단지 환경관리권 기초자치단체 권한 확대

5-1-3. 갯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립공원 승격 추진

## 5-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2-1.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5-2-2. 1군 1소방서 및 119구조대 설치

5-2-3.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건의



## 5-1-1

# 동부권에 실질적 「제2청사」 신설

### 목표

동부출장소가 동부권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2청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직제 보장 및 기능 강화

### 한 눈에 보는 공약

<b>사업기간</b>	임기 내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사업성격</b>	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b>사업비</b>	국비 <input type="checkbox"/>	도비 <input type="checkbox"/>
	임기 후 지속 <input type="checkbox"/>		비예산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비 <input type="checkbox"/>	민자 <input type="checkbox"/>

### 추진방향

- 동부권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동부출장소가 실질적인 제2청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동부권 현황 : 면적 35% / 인구 47% / 고용 56% / 생산실적 92%

### 추진계획

- 동부출장소(4급)를 동부지역본부(3급)로 격상
  - 동부출장소) 1과 3담당 17명 → 동부지역본부) 1본부 3과 11담당 56명
    - ※ 민선 6기 조직개편 : '14. 8. 1.(기구·정원 조례 공포)
- 사업내용
  - 여수국가산단 등 환경수요 증가에 따라 동부지역본부에 '환경국' 운영
  - 동부지역본부에 道 위임사무를 확대하여 '실질적 제2청사' 역할 수행
    - ※ 동부지역본부 위임사무('16. 12월 현재) :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 등 90건

### 기대 효과

- 도청과 원거리인 동부권에 대한 서비스 및 소통 강화
- 환경오염 관련 재난사고 등 동부권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 5-1-2 산업단지 환경관리권 기초자치단체 권한 확대

### 목표

3종 배출업소 환경관리권을 시·군에 위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 강화

### 한 눈에 보는 공약

사업기간	임기 내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성격	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국비	<input type="checkbox"/>	도비	<input type="checkbox"/>
	임기 후 지속	<input type="checkbox"/>		비예산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비	<input type="checkbox"/>	민자	<input type="checkbox"/>

### 추진방향

- 3종 대기·수질 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시·군 이양
-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권한 및 책임 강화

### 현황

- 3종 대기·수질 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시·군 위임(재위임)대상 : 126개 업체
  - 산단별 : 여수산단 18, 순천산단 1, 광양산단 3, 울촌산단 4, 오천산단 4, 대불산단 21, 산단외지역 75
  - 시군별 : 목포 7, 여수 22, 순천 6, 나주 12, 광양 12, 담양 4, 고흥 4, 보성 2, 화순 3, 장흥 3, 강진 3, 해남 2, 영암 23, 무안 6, 함평 6, 영광 2, 장성 7, 진도 2
  - 업종별 : 석유화학 12, 아스콘 19, 금속제품 10, 선박구성품 12, 도축·도계 10, 식품·수산물 11, 기타 52
- ┌ 위임전 총 사업장 : 4,412개소(동부지역본부 246, 민원소통실 110, 시·군 4,056)
- └ 위임후 총 사업장 : 4,412개소(동부지역본부 175, 민원소통실 55, 시·군 4,182)

#### < 현재 대기·폐수배출사업장 환경관리권 >

- 도 관리 : 1~3종 대기·수질배출시설, 유독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 시·군관리 : 4~5종 대기·수질배출업소, 유독물, 비산먼지, 악취, 폐기물, 오수 등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 ※ 배출업소 종별 구분(대기, 수질)

<대기> : 오염물질 발생량(연간)

- ▶ 1종 80톤이상, 2종 20톤이상
- ▶ 3종 10톤이상 ~ 20톤미만
- ▶ 4종 10톤미만, 5종 2톤미만

<수질> : 폐수배출량(1일)

- ▶ 1종 2,000톤이상, 2종 700톤이상
- ▶ 3종 200톤이상~700톤미만
- ▶ 4종 200톤미만, 5종 50톤미만

## ■ 추진계획

- 3종 대기·수질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위임(재위임)관련, 정책자문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16명) 및 시·군 의견 수렴 : '14. 8월
- 환경관리권 위임(재위임)여부 결재(도지사) : '14. 9월
- 3종 수질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재위임 승인 : '14. 10월
-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 개정 : '14. 12월
- 3종 대기·수질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시·군 위임(재위임) : '15. 1월  
- 3종 배출업소의 대기, 폐수, 유독물 허가·신고, 지도점검,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관계서류 이관

## ■ 기대 효과

- 기초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 부여로 산업단지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안전보호
- 인·허가 및 사업장 환경행정 업무 추진 시 민원 편의 도모

### 타 道 사례

- ▶ 산업단지 내·외 구분없이 1~3종 道 관장 : 전남, 제주
- ▶ 산업단지 내·외 구분없이 1~2종 道 관장 : 경기, 충남, 경북
- ▶ 산업단지 1~3종 道 관장 : 경남
- ▶ 산업단지 1~5종 및 산업단지 외 1~2종 道 관장 : 강원, 전북, 충북

## 5-1-3 갯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립공원 승격 추진

### 목표

- 무안, 신안갯벌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 별교갯벌은 도립공원 지정 후 단계적으로 국립공원 지정

### 한 눈에 보는 공약

사업기간	임기 내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성격	예산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비	국비	<input type="checkbox"/>	도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기 후 지속	<input type="checkbox"/>		비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시군비	<input type="checkbox"/>	민자	<input type="checkbox"/>

### 추진방향

- 비교우위에 있는 갯벌, 해안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남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승격 추진
- 전국의 42%를 차지하는 전남갯벌은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생물다양성 보고로 활용가치가 매우 뛰어나 생태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4. 7. ~ 2018. 6월
- 대 상 : 3개소(무안·신안갯벌도립공원, 별교갯벌)
- 면 적 : 무안 37km<sup>2</sup>, 신안 144km<sup>2</sup>, 별교갯벌 23km<sup>2</sup>('16. 1월 지정)
- 지정주체 : 환경부장관(관리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 사업내용
  - ▶ 무안, 신안갯벌도립공원 : 국립공원 승격
    - 자연자원조사 및 정책포럼, 국립공원 승격 지정 건의('15년)
    - 국립공원 지정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16년~'17년)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지정 고시('18년)
  - ▶ 별교갯벌도립공원('16. 1월 지정) : 국립공원 승격
    - 도립공원 지정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지정 고시('14년 하반기)후,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등 협의 후 건의('18년~ )
- 사 업 비 : 330백만원(도비)
  -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위한 자연자원조사 용역 등 150백만원
  - 주민설명회·공청회, 정책포럼, 관계기관 협의, 홍보 등 180백만원

## 연도별 자원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기투자	자원투자계획						'18.7월 이후
			소계	'14	'15	'16	'17	'18 (6월까지)	
계	330	-	330	200	70	20	20	20	-
도 비	330	-	330	200	70	20	20	20	-

## 관련기관 동향 및 의견

### < 국립공원 승격 지정 >

- (환경부) 전국 최초 갯벌국립공원 지정에 긍정적 의견
- (해양수산부) 가칭 「갯벌생태공원법」을 제정하여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나 국립공원 지정 중지 요청('16.2월,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 (지역주민) 국립공원 승격 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일부 반대
- (무안·신안군) 국립공원 승격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신중한 검토 필요

## 기대효과

- 공원관리가 국가로 전환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관리 기반 구축 및 고품격 탐방서비스 제공
- 공원관리 국비투자 확대 및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공원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 5-2-1

#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 목표

道 차원의 원자력 안전, 지역 방호대책을 강화하여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 구현

### 한 눈에 보는 공약

사업기간	임기 내 완료	<input type="checkbox"/>	사업성격	예산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비	국비	<input type="checkbox"/>	도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기 후 지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시군비	<input type="checkbox"/>	민자	<input type="checkbox"/>

### 추진방향

- 지역방사능 방재시스템 정비 등 구축 강화
- 관련 시·도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전담조직 설치 등 관리체계 강화 및 R&D 등 국책사업 유치·추진

### 추진계획

#### ① 지역방사능 방재시스템 정비 등 구축 강화

##### □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확충

- 환경방사선 감시망 확대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여 환경 방사선감시망 확충
    - ※ 영광군내 13개소 → 道, 인접 3개 군 18개소 추가, 총 31개소
  -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구축, 모니터링 결과 실시간 공개(하반기)
-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확대(10→30km) 시행('14. 11월)에 따른 주민보호 장비 및 물자 등 연차적 확보('15~'18년)
  - 대피소 재정비(현재 64개소) 및 개인 보호장구류(17천개→7만개) 등 추가 확보

##### □ 비상시 가동체계 정비 등 대응역량 강화

- 주민대피 등을 위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재점검하여 비상상황에 맞는 훈련체계의 조속한 정비로 주기적인 훈련 실시
  - 중앙단위 연합훈련(5→1년), 지자체 합동훈련(4→2년) 기간 단축
- 방사능 방재요원 지정 및 방사능 방재교육 강화
  - 방재요원 6개반 46명 지정, 방재교육(연 18시간) 의무화 추진 등
- 한빛원전 방사능 방호체계 내실 운영을 위해 법상기구인 '지역방호협의회(의장 : 도지사, 위원 13명) 설치·운영(하반기)



## ② 관련 시·도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원전소재 시·도와 상생협력, 공동대처를 위한 협의회 구성·추진
  - 부산·울산·경북도와 '원전관련 행정협의회' 협약체결 예정(하반기)
    - \* <주요내용> 원전 안전대책과 방사능 방재대책, 방재훈련 등 협력 및 대응
- 인접 광주광역시와도 원전안전 상생협력체계 구축·운영
  - 원전안전성, 방사능방재체계 구축 등 상호 협력 및 공동대처 방안 협력 논의
    - \* 민선 6기 광주시·전남도 공동정책 협약(14.5.25)과제, 긴밀한 협력방안 마련 추진

## ③ 전담조직 설치 등 관리체계 강화

- 道 차원의 한빛원전 안전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인력 충원(조직개편과 연계 계단위(4) 조직 신설)
  - \* 타 원전 소재 시·도(부산 과단위 7명, 경북(계단위 4명)는 전담 조직 설치·운영

## ④ 원전관련 R&D 등 국책사업 유치·추진

- 원자력발전 설비 등 대형구조물 설비의 내부결함을 검사·장비개발 등을 하는 “비파괴검사기술연구기반 구축” 등 국책사업 유치
  - \* <사업개요> 위치 : 전남 영광군/ 사업비 : 450억원(국비 400, 지방비 50)/ 사업내용 : 비파괴검사 기술·장비 개발, 시험인증센터 구축 등
- 원전 사고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서남권 중입자 진료센터” 유치(장기사업)

## 연도별 자원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기투자	자원투자계획						
			소계	'14	'15	'16	'17	'18 (6월까지)	
계	도비	2,118	10	2,078	86	710	66	680	566
장비물자	도비	1,920	-	1,920	50	650	50	620	550
교육훈련	도비	168	10	158	6	60	16	60	16
홈페이지	도비	30	-	-	30	-	-	-	-

## 기대효과

- 방사능 방재 사전 예방기능 강화와 비상시 가동체계 정비 등 대응능력 강화로 道 차원의 안전성 확보
- 관련 시·도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로 지자체 원전 대응역량 제고
- 원전관련 R&D 등 국책사업 유치를 통하여 안전기반 강화

추진부서

사회재난과  
지역경제과

원전안전팀장 김광철  
과학융합팀장 고영량

담당자 문정금(☎3052)  
담당자 박정희(☎3831)

## 5-2-2

# 1군 1소방서 및 119구조대 설치

### 목표

- 소방서 미설치 10개 군(郡)에 소방서 단계적 설치
- 소방서 설치 전까지 군(郡)지역 119구조대 우선 보장

### 한 눈에 보는 공약

사업기간	임기 내 완료	<input type="checkbox"/>	사업성격	예산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비	국비	<input type="checkbox"/>	도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기 후 지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시군비	<input type="checkbox"/>	민자	<input type="checkbox"/>

### 추진방향

- ‘안전한 전남 만들기’를 위한 군(郡)지역 소방서 단계적 설치
  - ※ 도 재정여건을 감안 중장기 계획으로 단계적 확충
- 소방서 설치 전까지 인명구조 능력보강을 위한 119구조대 신설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4. 10. ~ 2018. 6월
- 사업량 : 10개 군(郡)
  - 곡성 · 구례 · 고흥 · 장흥 · 무안 · 함평 · 장성 · 완도 · 진도 · 신안군
- 사업내용
  - 소방서 설치(4개소) : ‘15년(무안), ‘16년(고흥), ‘17년(장성), ‘18년(완도)
    - ※ 미설치 6개 군(郡) 소방서는 ‘19년부터 단계적 설치
    - ※ 소방 활동실적(수요) 분석

구분	인구(명)	면적(km <sup>2</sup> )	소방대상물	화재	구조	구급
무안	77,208	448.93	1,555	117	593	2,650
고흥	72,152	776.47	1,463	109	702	1,944
장성	47,704	518.46	1,187	92	610	1,616
완도	54,516	396.24	1,116	60	290	948

- 구조대 설치(10개소) : ‘14년(고흥 · 진도), ‘15년(무안 · 함평 · 완도), ‘16년(장흥 · 곡성), ‘17년(장성 · 구례), ‘18년(신안)

○ 연도별 인력 및 차량 보장 계획

구분 \ 연도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원인력(명)	297	61	72	59	59	46
보강차량(대)	48	4	13	11	11	9

\* 차량 · 인력기준 : 소방서 7대, 33명 / 일반구조대 2대, 13명

○ 사업비 : 44,068백만원

**연도별 자원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자원투자계획						'18.7월 이후
			소계	'14	'15	'16	'17	'18 (6월까지)	
계	44,068	-	21,568	1,724	7,869	2,575	4,700	4,700	22,500
도비	44,068	-	21,568	1,724	7,869	2,575	4,700	4,700	22,500

\* 고흥·완도소방서는 기존 안전센터 건물 활용하여 신축비 절감

\*\* 인력은 기준인건비(보통교부세) 범위 내 총원

**기대 효과**

- 소방 수요 및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선제적 안전시스템 확보
- 예측 곤란한 재난발생에 대비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 구축
- 차별 없는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안전복지 증진

**추진부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장 최형호

담당자 최진석(☎0721)

예산장비팀장 장경숙

담당자 서승호(☎0751)

## 5-2-3

#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건의

### 목표

선박안전관리를 일원화 하고 대형 해난사고에 선제적 대응 및 해양안전교육 등을 위해 해상교통안전관리공단을 설립 건의

### 한 눈에 보는 공약

<b>사업기간</b>	임기 내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사업성격</b>	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b>사업비</b>	국비 <input type="checkbox"/>	도비 <input type="checkbox"/>
	임기 후 지속 <input type="checkbox"/>		비예산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비 <input type="checkbox"/>	민자 <input type="checkbox"/>

### 필요성

- 위그선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해상교통량 증가
- 해상교통안전 사고시 피해규모가 대규모이나 체계적 관리 미흡
  - (사 례) 허베이스피리트(07.12), 우이산호 (14.1), 세월호 침몰사고(14.4) 등
-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해양사고 감소 및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
  - (안전관리) 연안여객선(해운조합), 화물선(해수부), 유조선(해경), 어선(지자체)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인 운항관리자를 여객선사 이익단체인 한국 해운조합 소속에 두고 있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는 구조
  - (운항관리자 권한) 연안여객선의 과적 · 과승 단속 및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11년 공단 설립을 추진(해사안전법 개정)하였으나 정부내 의견조율이 안되어 폐기

### 주요기능

- 현재 선박 종류별로 분리되어 있는 해양교통안전 기능을 해양사고사전 예방차원에 초점을 맞춘 통합관리 체제로 구축
  - 해양교통안전 중·장기 정책지원, 해상교육안전 연구개발(R&D), 선박 안전진단 및 교육·홍보, 선박 긴급수리, 선박 운항자 교육 등
- 여객선 등 안전운항 단속 권한이 있는 운항관리자를 해상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두어(국가책임) 관리 감독 강화

## ■ 추진계획

- (정부건의) 해상교통 수요가 많은 우리 도에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예정인 “국가안전처” 등에 건의
  - 규모 : 20천㎡ / 사업비 : 500억원 / 위치 : 전라남도 관내
- (활용방안) 최근 설립한 해양경찰청 해난구조훈련원(여수 소재 해양경찰 교육원)과 연계해 해난구조 특화 교육기관으로 운영
-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4. 9. ~
  - 참여기관 : 해양항만청, 해양경찰, 대학교수 등 관련기관 전문가
  - 역할 : 우리 도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정부 동향 파악 등

## ■ 기대 효과

- 해상교육안전 연구개발(R&D), 선박안전진단 및 교육·홍보, 안전운항정보 수집 및 배포 등 해양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 가능